

2020년 초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공무원 피살...남북관계 파행

2020년 남북관계는 파국을 우려할 만큼 끔찍 얼어붙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남북관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이 국경마저 걸어 잠그면서 사실상 모든 교류가 중단됐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 소극적으로 나온 것도 파행의 중요한 이유였다.

북한은 일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 하더니 6월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대남 군사행동까지 경고함으로써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며 다소 누그러졌지만 9월 서해에서 남측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되는 사건이 벌어지며 또다시 경색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0년 1월 1일 매년 하던 신년사를 생략하고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한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 2019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10번 언급하며 남북협력·교류의 전면적 확대를 강조하고 '전제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 재개' 의사를 내비친 것과 비교하면 메시지가 크게 달라졌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협상이 난항인 상황에서 남측 역할의 한계를 절감한데 따른 것으로,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없을 것임을 예감케 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2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월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에서 비핵화 협상이 난항인 국면을 반영하듯 미국에는 한층 날카로운 태도를 보였다.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핵·대륙간탄도미사일(CBM) 시험 중단 등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한 '선제적 중대조치들'에 미국이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추가 제재로 응답했다며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 앞에 증명해 보였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경제건설 총력집중'으로 전환하고,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등 일련의 비핵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를 사실상 되돌리겠다는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황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단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7일 신년사에서 변함없는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1월 21일에는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남측의 관계 개선 노력에 북측은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영향도 있지만 연초부터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닫는 등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 다른 데 눈을 돌릴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북한은 국경을 접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1월 24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데 이어 국경 폐쇄 조치를 내리고 쓸쓸한 외화별이 수단인 외국인 관광도 전면 중단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잠정 폐쇄했다.

2월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검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경우 초래될 후과는 심각할 것"이라며 초특급 방역을 지시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방역협력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며 "사람과 가족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채택 2주년을 앞둔 4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상 발전하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던 와중에 북한군의 총탄이 한국군 감시초소(GP)에 박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월 3일 "오늘 오전 7시 41분께 중부 전선 GP에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GP 외벽에서 4발의 탄흔과 탄두 등이 발견된 것이었다. 북한군 GP에서 운용 중인 화기로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군은 10여 발씩 2회에 걸쳐 경고사격을 한 뒤 사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했다.

남측 인원과 장비 피해는 없었다. 군은 즉각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문문을 보내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북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군은 의도적 도발이라고 보다는 당시 기상과 북한군 동향 등을 고려해 오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군은 북한의 총격이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군사합의 체결 이후 GP에서 총격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정전협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다국적 특별조사팀을 구성했고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14.5mm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며, 한국군의 대응 총격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군사정전협정 1조 6항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됐다.

유엔사 공보장교인 리 피터스 대령은 "유엔사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을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한국군도 30발로 응사했는데, 유엔사는 이를 '과잉 대응'으로 해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접경지역에서 유엔사 교전수칙은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게 돼 있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총격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합참은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비협조로 북측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우리 현장 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당시 대응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GP 총격사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던 북한은 갑자기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일 담화를 쏟아내며 긴장을 한껏 끌어올렸다. 포문은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영정 노동당 제1부장이 열었다.

2018년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한과의 대화 물꼬를 튼 메신저이자 대남 특사 역할을 했던 그가 대남 비난의 선두에 선 것이다. 그는 6월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치를 세

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뼈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대가 절망으로, 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 번만 보지 않았을 테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며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에 연락사무소 폐쇄까지 거론하자 정부는 즉각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빠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이를 법률을 통해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단 살포 단체 대표들을 수사의뢰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하자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전단 살포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조, 법률 전문가와 접경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방침에도 북한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6월 5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통전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며 "어차피 날려 보낼 것, 깨버릴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나으리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조치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일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단 중단을 위한 법률을 준비 중이라는 통일부 설명을 두고도 "고단수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법안도 없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서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지는 군사 분야의 합의서에 열렁뚱땅 서명했다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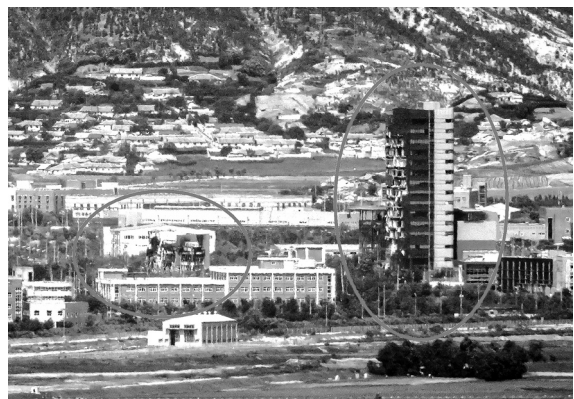
북한의 경고는 곧 행동으로 옮겨졌다. 첫 조치는 모든 연락 채널 차단으로, 북한은 6월 9일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

함해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연락선,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당 제1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청와대는 6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튿날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담화를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조선 속담이 그른 데 없다"면서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 제1부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6월 13일 담화를 내고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사업 연관 부서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면서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해 사실상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김 제1부장은 "보복계획은 대적 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면서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 댈 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말해 행동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철거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 6월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왼쪽)와 부서진 개성공단지원센터(오른쪽)

김 제1부장의 경고는 곧 현실이 됐다. 북한은 6월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북한 매체들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깨(남김없이) 받아 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해 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은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

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도 이날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고, 이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 철거에 이어 개성에 군 투입의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청와대는 즉각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북한의 연락사무소 일방 폭파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뒤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튿날도 북한의 담화 '폭탄'은 계속됐다. 김영정 제1부장은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과 6·15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영상 메시지를 두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면서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목인'을 재차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자의 이번 연설은 응당 사회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했으나 변명과 술수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을 외부로 돌렸으면서 "뿌리 깊은 사대주의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로 종달음치고 있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 이상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어쨌든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됐다"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 것"이라고 기존 경고를 반복했다.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도 동시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적은 역시 적"이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남조선 당국과의 무슨 교류나 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북한은 남측이 6월 15일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김정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 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며 이렇듯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한 데 대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장은 뻔한 술수가 연이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가만있지 않았다. 윤도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김영정의 담화에 대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

력히 비판한 뒤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특사 파견 제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서도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의 잇따른 대남 비난에도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던 청와대가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국가원수까지 모독하고 특사 파견 제안까지 일방 공개하자 강경 대응한 것이다.

북한은 이에 더해 이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제목의 입장문에서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서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며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해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 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 근무체제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를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로, 2000년대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던 개성과 금강산이 참여한 군사 대결장으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전반적 전선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 역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할 수 있다.

가파르게 고조되던 군사적 긴장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면서 수그러들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6월 들어 이뤄지던 대남 파상공세에 김여정을 내세우고 등장하지 않던 김 위원장이 막판에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주민 결속과 강력한 대남 경고, 국제사회의 이목 집중 등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대남 군사행동에 곧바로 착수했다가는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재개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의 '보류' 지시 이후에 북한은 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최전방 지역에 다시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일부를 도로 철거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소용돌이 속에서 통일부 장관이 교체됐다. 김연철 장관은 6월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났고, 후임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 장관은 대북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인도적 협력과 '작은 교역'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북 간에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안보적 계산 없이 중단없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도적 지원과 보건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고 국경을 걸어잠근 채 자력 경쟁에만 몰두했다.

특히 여름에 홍수 피해가 컸지만 남측의 수해 복구 지원의 사에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8월 13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수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면서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홍수)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않으며 국경을 더욱 철동같이 단아 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시했다. 남측을 비롯한 외부 지원을 거부한다고 못박은 것이다. 실제 북한은 항구와 철도 등을 통해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철저한 소독은 물론 해상이나 공중에서 날아오는 물체를 즉시 소각 처리할 정도로 코로나 방역에 신경을 썼다.

철저함을 넘어 과도하게 여겨지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태세는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남측 민간인이 사살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9월 21일 낮 1시께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그는 당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군 당국은 24일 북한군이 A씨를 해상에서 총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에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실종 신고 접수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로 발견됐다. 북측 선원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A씨로부터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로부터 6시간 정도 지난 오후 9시 40분께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A씨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총격 직전에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군은 밝혔다.

이어 오후 10시 11분께 북측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으며, 이런 정황은 연평도 감시장비에서 관측된 북측 해상의 불빛으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대응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잔혹하게 남측 민간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이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즉각 사과하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

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지문에는 김 위원장의 사과 입장과 함께 북한 지도부의 입장도 포함됐다.

북측은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했다"며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북남 사이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 지도부는 이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사건 경위도 설명했다. 북한군은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인근 북한 영해에서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수산사업소 부업서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북측은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 한두 번은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며 "계속 함구무연하고 불응해 2발의 공탄을 쏘자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옆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도 보았다고 한다"며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을 사격했고,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전했다.

북측은 "사격 후 아무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0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은 '시신을 훼손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A씨에 대한 총격이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남북의 설명이 엇갈렸다. 남측은 사격 직전 해군사령부 계통의 지시가 있는 정황이 있다고 했으나 북측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부유물에 올라타 북측 해역에서 발견이 된 점과 선박에 신발을 벗어두고 간 점, 북측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군은 제시했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만행', '음부의 대가'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선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쓴 데 대해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사실 상황에 대한 남북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남측은 서해상에서 A씨 시신 수습을 위한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북측은 남측이 수색 과정에서 영해를 침범했다며 시신을 수색해 찾으면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27일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인용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술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해상 수색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통상 북측이 주장해 온 영해의 기준이 남측과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북측은 또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며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 차장은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의 공동조사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군통신선 재가동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한은 사건 발생한 달여가 지난 10월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사건 발생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남측 보수세력의 비난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해상 수역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미안한 마음도 남측에 전달했으며 남측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험담을 묵새기며 최대의 인내로 자제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서해 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남측 주민이 어떤 의도로 우리 측 수역에 불법 침입했는지도 모르고 단속에 즉각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 근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 것은 남측에서도 볼 보듯이 헤아릴 수 있는 뻔한 이치"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것은 악담이 도를 넘고 이 사건을 국제적인 반공화국 모략수동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껏 견지해 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다시 흔들어놓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을 거론하며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하고 동족을 마구 헐뜯는 데 피눈이 돼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이처럼 야당을 비난한 것은 이 사건이 유엔총회에서 논의되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군에 의한 남측 민간인 사살 사건은 자칫 남북관계가 추가로 경색되는 악재가 되리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경위 설명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지는 않았다. 또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된 상황에서도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라고 언급한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사실 사건 발생 전에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9월 8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 상황에서 집중호우, 수차례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재난 현장을 직접 찾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한 데 이어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이겨낼 것"이라며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보낸 답신에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과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측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대풍 피해를 거론하며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시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는다”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리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며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다. 진심을 다해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3월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친서를 주고받았다. 당시엔 김 위원장이 먼저 친서를 보냈다. 그는 3월 4일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남측이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며 “남녘 동포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고,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고 하며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고 청와대 측은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감사의 답장을 보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의 대남비난은 김여정 제부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트집 잡으면서 재개됐다. 김 부부장은 12월 8일 담화에서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욱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속심이 뻔히 들여다보인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이 5일 한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코로나19)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한 데 대해 발끈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으며 방역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을 남측 외교장관이 정면으로 부정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끝내 남측 지원을 모두 거부했다. 2019년에 결정했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5만에 이르는 대북 쌀 지원도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고려해 쌀 지원을 결정했지만 북한은 처음에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수령을 거부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진척이 없었다.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비로 WFP에 지급했던 비용을 12월에 환수하면서 대북 쌀 지원 사업은 성과없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한편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9일 공포됐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에 맞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

북한은 장기적인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태풍 피해까지 겹치는 삼중고 속에서 내치에 힘을 쏟았다. 김 위원장은 10월 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2021년 초로 예고한 8차 당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80일 전투’를 연말까지 전개하기로 했다.

10월 10일에는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개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병식 기념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외부 위협에 맞서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0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적대 세력들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 자위적 정당 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 중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핵’도 적시하지 않았다. ‘자위적 억제력’이라는 표현으로 핵무기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오로지 체제 수호를 위한 수비용임을 거듭 피력했다. 남측에는 짧지만 분명한 유화적 메시지를 내뿜었다. 김 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코로나19) 보건의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사그라지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한 메시지였다.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수해로 인한 ‘삼중고’로 힘들었던 한 해를 짊어지며 인민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도 거듭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 중간에 울먹이며 “너무